

2003. 11. 19(수) 10:00

第104回 臨時會제2차본회의

# 郡政質問

李文珩議員

마리면 출신 이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태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는 자본과 인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서울과 수도권  
권으로 집중되어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수도권 편

중현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돈과 인재가 넘치는 반면, 지방은 그 반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분권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과 우리 군의회의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고, 군수 공약 사항이면서 우리 군민의 미래가 담겨 있는 『선택과 집중』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요즘 학교 급식문제로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행정기관에 과잉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자원의 지방분산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행·재정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지방은 재정과 자원의 부족으로 창의적인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식기반의 핵심인 지방대학의 위상 추락으로 학생들도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전제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임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지난 4월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와 연수회에 참석하는 등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의지를 다져 왔습니다.

노무현 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통령 후보자격으로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관

련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 일곱 가지를 약속하였고, 또, 취임 초기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지방분권은 나라가 살길이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추진단체가 구성되고 추진 운동이 가시화된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본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지역언론사 대표, 시민단체 대표, 학계 대표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가 모여 집행기관인 거창군에서 "범군민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방분권추진운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결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범군민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또, 주요 사업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의 지방분권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군민 앞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민선 제3기 출범의 군정 슬로건인 “희망 21! 선택과 집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21! 선택과 집중”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목표가 달성되는 2007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보다 소득면에서는 얼마나 더 나아지고, 환경 분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 여건은 얼마나 질적 향상을 가져오며, 복지면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편리해지며, 경제면에서는 첨단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예상되는 고용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총 3억 4,000여 만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분야별로 1년 이상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각 분야별 용역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용역결과와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희망21! 선택과 집중” 사업이 목표연도인 2007년도까지 달성되려면 지금쯤은 배가 항구를 출발하여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용역도 완료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과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은 공모 마감 후 20여일만에 공모작 결정 심사를 하였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공모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경남발전연구원」이 과업수행을 포기하였다는데 계약을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희망21! 선택과 집중”의 분야별 과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변경하여 지역 여건이나 현실성 있는 과제를 재선정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번 국회의원선거와 군수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용역발주도 못한 현상태에서 내년 총선에도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학교 급식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행정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문제이고 지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군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TV 등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면서 집단 식중독으로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못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 급식의 주재료인 농·수산물의 구입과 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통제 방법 등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공급자가 임의로 구입한 농·수

산물을 조리하여 공급하면서 본의 아니게 부패된 재료의 구입이나 관리의 소홀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35개 초·중·고등학교 중 중학교 8개교를 제외한 27개교에서 단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음식물도 가급적이면 싱싱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이 불량농산물을 섭취하여 체내에 유독 물질이 누적된다든지 식중독으로 정상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염려 속에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하자는 요구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급식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거창군 홈페이지를 도배하기 시작하여, 11월 초에는 지역신문 1면 전면을 할애하는 등 유아교육 문제가 우리 지역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나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자녀 보육지원을 위해 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되었고, 현재 상동어린이집 등 5개소에 2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들이 "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부모들의 원성이 있고, 둘째, 입소를 했으나 3년단위로 구분하여 1년차는 2년간, 2년차는 1년간 계속해서 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다른 시설로 옮기든지 재추첨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유아원생의 정서안정 등의 문제가 있으며, 셋째, 5개 공립어린이집 가운데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동어린이

집은 각각 59명의 재원 어린이 중 50%가 넘는 33명이 공직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문제는 언제부터 왜 생겼으며, 이런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동어린이집의 입소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돼 공직자 자녀가 많이 입소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교육비 부담이 적고, 간식을 비롯한 급식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립어린이집 출신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을 잘한다는 여론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마음놓고 말

겨 놓고 직장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부 시책도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등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이 직장에 나가기 위해 아이를 맡기는 문제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며, 거창의 경우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경남도가 지난해 맞벌이 부부 탁아문제 해결 등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계획안에 우리 거창군의 경우 몇 개

소, 몇 명이 이용하는 시설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거창군은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바 있으며, 우리 군도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신청을 해 놓았고, 교육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유아들의 보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사설 보육시설에도 공립과 같이 좋은 프로그램과 급식문제해결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설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